

7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1. 행정이념으로서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롤스(Rawls)의 최소최대 원칙(minimax principle)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 ②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욕구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 ③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 행정예의 참여와 가치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에서 주목한 바 있다.

2. 로즈(Rhodes)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이다.
- ② 이슈네트워크의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 ③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동기는 소유 자원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
- ④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유사하며,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②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은 언론사의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④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4. 라스웰(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 ②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
- ③ 정책적 의사결정을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④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을 장려한다.

5.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공익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이해된다.
- ③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의익 등 다양한 책임성 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6. 조직효과성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에서 조직의 성장 및 자원획득의 목표를 강조하는 관점은?

- ① 개방체제 관점
- ② 내부과정 관점
- ③ 인간관계 관점
- ④ 합리적 목표 관점

7.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하였다.
- 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외청으로 독립시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었다.
- ㄷ.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두었다.
- ㄹ. 일관성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담당하게 하였다.
- ㅁ.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8. 주민참여제도 중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 ① 주민소환제
- ② 조례제정개폐청구제
- ③ 주민투표제
- ④ 주민소송제

9.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는 않는 것은?

- 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0. 미국의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20년대와 30년대의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였다.
- ② 미국 태프트위원회에서 사용한 절약과 능률은 행정관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됐다.
- ③ 브라운위원회에서 제시된 능률적인 관리활동은 POSDCoRB로 집약된다.
- ④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은 대공황과 뉴딜(New Deal)정책 이후에도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

11.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포자 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 ② 이슈관심주기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 자체에 생명주기가 있다고 본다.
- ③ 정책흐름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과는 다른 합리성 가정을 의제설정과정의 설명에 적용한다.
- ④ 동형화 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12. 정책의제설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문제에 대한 통계지표의 오류는 바람직한 의제설정을 어렵게 한다.
- ② 크렌슨(Crenson)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의제화한다고 한다.
- ③ 우리나라의 1960년대 경제제일주의는 많은 노동문제를 정부의제로 공식 검토되지 않게 하였다.
- ④ 정치체제의 가용자원 한계는 정책의제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13. 신성과주의 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 ②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 ③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이다.
- ④ 예산집행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14. 행정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치적 능력과는 구분된다.
- ② 지적 능력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행정학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 ③ 실행적 능력은 정치 및 민간 지원의 확보능력을 포괄한다.
- ④ 행정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요인들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15. 정책의 유형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로위(Low)의 정책 분류는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재분배정책으로 볼 수 있다.
- ③ 로위(Low)는 군인연금에 관한 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분류한다.
- ④ 로위(Low)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가 용이해졌다.

16. 성과평가의 방법과 모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논리모형(Logic Model)은 직무활동이 설정된 성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보다는 단기적인 산출물을 중시한다.
- ㄴ. 성과표준평정법(Performance Standard Appraisal)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수준을 명시한다.
- ㄷ.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card)은 내부과정의 관점보다는 고객 관점의 평가방법이다.
- ㄹ. 행태관찰평정법(Behavioral Observation Scales)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행태를 관찰하여 활동의 발생빈도를 측정한다.

- ① ㄴ, ㄹ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17.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최협의적으로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 ②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를 통해 공공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한다.
- ③ 행정의 활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 ④ 행정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18. <보기>에서 예산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총액계상제도	ㄴ. 이용
ㄷ. 전용	ㄹ. 이월제도
ㄴ. 계속비제도	ㅁ. 국고채무부담행위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 ③ ㄹ, ㅁ, ㅂ ④ ㄴ, ㄹ, ㅁ

19.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책임성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과정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 ②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장책임성은 고객 만족에 의한 행정책임을 포함한다.
- ③ 법적 책임의 확보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 ④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20.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주무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서울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서울시장은 주무부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위 ③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급 서울시 행정학 (정답 및 해설)

1. (답) ① 롤스(Rawls)의 최대최소 원칙(maxmin principle)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참고>>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의 구분과 관련하여 공평의 대상을 기회의 형평으로 보느냐, 결과의 형평으로 보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기회의 형평'으로 보아 실적 이론은 수평적 형평으로, 결과의 형평은 수직적 형평으로 보나, 위 문제는 공평의 대상을 '결과의 형평'으로 보아 반대로 표현하였다.

2. (답) ④ 정책네트워크는 특정 정책과 관련된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현상이다. 따라서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다만 정책네트워크 중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산출이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유사하고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다소 용이하며,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산출이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상이하고,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보다 곤란하다.

<<핵심체크>>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

구분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참여의 특징	폐쇄적이며 제한적 참여	광범위하며 개방적인 참여
주요 참여자	정부관료, 전문가, 학자, 국회의원 보좌관, 연구원 등(단순한 이해관계자 배제)	관련된 모든 이익집단, 전문가, 개인, 언론 등(단순한 이해 관계자 참여)
참여자간의 권한과 자원배분	모든 참여자가 상호교환 할 수 있는 권한 및 자원을 보유하며, 참여자간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함	참여자의 일부만 자원 및 권한을 보유하며, 상황에 따라 중요한 자원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주도적 행위자도 변함
참여자간의 관계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이며,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이며,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
권력과 게임의 유형	참여자 간의 권력이 균형적이며 positive sum game이 이루어짐	참여자간의 권력이 불균등하며 negative sum game이 이루어짐
상호 작용	안정적이고 질서적이며 상호작용이 빈번함	불안정적이고 무질서하며 접촉의 빈도가 가변적임
이익의 유형	경제적·전문적 이익	모든 이익
정책산출	의도한 대로 정책산출이 가능하므로 예측이 용이하며,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가 유사	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이 변동하므로 정책산출의 예측이 곤란하며,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가 상이

3. (답)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처벌).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형사처벌 할 수 없음).

4. (답) ② 라스웰(Lasswell)에 의하면 정책과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process에 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contents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 중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정책이 어떻게 형성·결정·집행되어 산출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반면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정에 활용되어 정책형성·결정·집행·평가에 도움을 주는 규범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5. (답) ③ 신공공서비스론에 의하면 정부는 방향잡기의 역할이 아닌 봉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6. (답) ① 경쟁가치모형 중 개방체제 관점은 조직의 성장 및 자원획득을 목표로 하고 유연성과 외적평가를 수단으로 한다.

<<핵심체크>> 경쟁가치모형

구분	외부	내부
융통성	<개방체제모형> ·목표 : 성장 및 자원(수단) 확보 ·수단 : 유연성, 외적 평가	<인간관계모형> ·목표 : 인적자원의 개발 ·수단 : 구성원의 응집력, 사기
통제	<합리목표모형> ·목표 : 생산성, 효율성, 이윤 ·수단 : 합리적 기획, 목표 설정	<내부과정모형> ·목표 : 안정성과 균형 ·수단 : 정보관리, 의사전달

7. (답) ②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행정경찰청은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두었다(ㄴ). 현 정부는 일관성 있는 수자원관리를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물관리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ㄹ).

<<핵심체크>>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

변경사항		구체적 내용
신 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산하)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찰본부와 소방방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으로 신설
	소방청(행정안전부 산하)	
사무 이관 및 흡수	행정안전부	과거 국민안전처가 담당했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사무를 흡수하여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폐지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담당사무를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소방청으로 이관
명칭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변경(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둠)
지위 격상 및 격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변경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

8. (답) ②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입법순서는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1999), 주민감사청구제(1999), 주민투표제(2004), 주민소송제(2006), 주민소환제(2007) 순으로 입법화되었다.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입법순서

주민참여제도의 입법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1999), 주민감사청구제도(1999), 주민투표제(2004), 주민소송제(2006), 주민소환제(2007) 순으로 입법화되었으며, 모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다만, 주민참여예산은 2006년에 입법화되고 2011년에 의무화되었으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

9. (답) ③ 주민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자는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핵심체크>> 주민투표제도

의의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 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투표법」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민투표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부의(실시)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투표 청구·요구권자 및 실시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단체장에게 청구 · 지방의회 : 재적의원 1/2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단체장에게 청구 · 자치단체의 장 : 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반드시 투표에 부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결과에 대한 구속력도 없음)
투표 형식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
투표결과 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주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에는 주민투표로도 변경 불가능
불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기초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광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소청할 수 있고, 소청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는 고등법원에, 광역은 대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 주민투표에 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재투표 실시

10. (답) ④ '관리과학으로서 주류 행정학(행정관리설)'은 절약과 능률의 가치를 중시하였으며, 정치행정이론과 행정의 원리라는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구성되어 미국에서 1920년대 ~ 30년대 지배적인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공황과 뉴딜(New Deal)정책 이후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정치행정이론론(통치기능설)이 대두되면서 퇴조하였다.

11. (답) ④ 동형화 모형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정부 간 정책전이는 모방적 동형화(특정조직이 자발적으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특정영역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조건과 방법을 정의하고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특정조직이 다른 조직들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형화)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오답정리>>

- ① 포자모형은 곰팡이의 포자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균사체로 성장할 수 있듯이, 사회문제도 유리한 사회적 환경(점화장치와 이슈창도자의 적극적 역할)이 조성되어야 정책의제화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따라서 포자 모형은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보다는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 ② 이슈관심주기 모형은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일반 대중은 중요한 국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심을 주지 못한다고 보면서 이슈관심주기(생명주기)를 제시한다. 이슈관심주기의 단계는 이슈의 잠복 →이슈의 발견과 표면화→관심의 현저한 증가와 비용 인식→대중관심의 점진적 감소→관심의 쇠퇴로 구성된다.
- ③ 정책흐름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에 근거한 모형으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과 동일한 합리성 가정을 의제설정과정의 설명에 적용한다.

12. (답) ② 크렌슨(Crenson)의 '대기오염의 비정치화 이론'에 의하면 공장공해 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이익은 분산되고 비용은 일부집단에 집중되는 전체적 문제는 비용부담집단의 적극적인 반대로 정책의제화가 곤란하다.

13. (답) ② 신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했으며 어떠한 결과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를 말한다. 신성과주의 예산은 새로운 예산서 형식(프로그램 구조)이나 회계 제도의 개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며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활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보다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제한적이다.

<<핵심체크>> 신성과주의 예산

개념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성과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 중심의 예산제도
배경	정부실패와 신공공관리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과정과 기능 중시 : 예산서의 형식보다는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 중시 · 집행의 재량과 결과의 책임 중시 : 집행에 대한 재량 대신 인센티브 체제 강조 · 통합성과관리체제 구축 : 예산을 사업성과에 대한 계약 개념(인센티브)으로 활용 · 시장주의 적용 : 다른 부서에 대한 업무지원 대가를 시장가격 수준에서 징수 등 가격원리 적용 · 총액통제와 지출 재량 교환 : 지출통제 예산, 총괄경상비 제도 등의 활용
운영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구하는 가치 : 효율성(지출가치의 증대) · 총량에 대한 중앙 통제(중앙집권적 성격) : 총액통제와 지출재량 교환 · 예산편성에서의 자율성 :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 예산운영의 신속성 부여(예산운영의 분권화) : 예산운영의 분권화 ·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책임 : 성과를 측정하여 책임과 인센티브 부여 · 회계제도의 개혁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활용
장점	① 성과에 대한 책임강조로 관료의 책임성 향상, ② 성과를 주로 고객에의 대응성으로 파악하므로 행정의 대응성 향상, ③ 효율성(성과) 향상
단점	① 성과목표설정 및 성과지표 설정 곤란, ② 공동지표 개발이 어려워 성과비교 곤란, ③ 성과를 결과로 인식할 경우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한 억울한 책임 야기, ④ 정보의 과다 현상
미국 의 예산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GPRA) : 클린턴 정부에서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영향을 줌 · 프로그램 평가 등급 기법(PART) : 부시 정부에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영향을 줌

14. (답) ① 행정능력은 정치적 능력(민주주의적 책임성 확보, 고객지향적 대응성 확보), 지적 능력(전문지식, 정보, 창의성), 실행적 능력(리더십, 동기부여, 자원확보능력, 정치 및 민간의 지원 확보 능력)으로 구성된다.

15. (답) ① 로위(Low)는 규제정책은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이, 재분배정책은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아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오답정리>>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추출정책으로 볼 수 있다.
 ③ 로위(Low)는 군인연금에 관한 정책을 구성정책으로 분류한다.
 ④ 로위(Low)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 영역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하였으나 연역적 추론에 따른 분류라는 점, 분류된 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이지 못하다는 점, 정책분류에서 사용한 기본개념들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조작적 정의가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16. (답) ① 성과표준평정법은 성과목표에 따른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성과표준평정법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수준(성과기준)을 명시야 한다(ㄴ). 행태관찰평정법은 한편에는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에는 관찰된 사건의 빈도수를 표시하는 척도를 구성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행태관찰평정법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행태를 관찰하여 활동의 발생 빈도를 측정한다.

<<오답정리>>
 ㄴ. 논리모형은 직무활동과 설정된 성과목표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활동→산출→결과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논리모형은 직무활동의 단기적 산출물보다는 직무활동이 설정된 성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ㄷ. 균형성과평정법은 조직의 비전과 전략 하에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과정 관점, 성장 및 학습 관점에서 핵심성공요소를 측정가능한 핵심지표로 구체화하여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이다. 따라서 균형성과평정법은 내부과정 관점과 고객관점을 모두 중시한다.

17. (답) ④ 행정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하나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민간부문 및 준정부부문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행한다.

<<핵심체크>> 행정의 개념

광의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력적 활동 ⇨ 공·사행정 모두 포함	
협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관료제의 활동 ⇨ 공행정만을 의미	
최근(거버넌스)의 행정개념	의의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 및 '상호작용'
	특징	·공공문제 해결을 통한 공익 지향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활동 ·정치과정과 연계 :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정치과정과 연계된 활동 ·상호작용 : 준정부부문·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행정수행

18. (답) ③ 예산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는 (기간) 한정성의 예외 장치들이 있다. (기간) 한정성의 예외 장치로는 이월제도(ㄹ)와 계속비제도(ㄷ)가 이에 속한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새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실제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부터 예산에 계상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다(ㄴ).

19. (답) ④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에 인하여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자율적·수동적 책임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책임은 자율적 책임성이다. <<핵심체크>> 자율적 책임과 제도적 책임

자율적 책임성(적극적 책임)	제도적 책임성(소극적 책임)
공무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율적·능동적 책임	공무원이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로 인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타율적·수동적 책임
대응성 개념에 입각한 행정 책임	파이너(Finer)의 행정책임과 연계
문책자의 부재 및 내재화	문책자의 존재 및 외재화
절차의 준수와 책임 완수는 별개	절차의 준수 중시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할 수 없음	공식적·제도적 통제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없음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제재수단의 부재	제재수단의 존재

20. (답) ③ 서울시장은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체크>> 직무이행명령

단체장의 위임사무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 단체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주무부장관은 해당 단체장이 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단체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